

“민간위탁 사업 사후검증 절차 부실”

김성수 도의원 “작년 전북자치도 민간위탁 규모 총 50건에 412억원에 달해
명확한 기준 없어 일부만 사후검증... 10억 넘는 사업, 외부 전문가 검증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감사·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 즉 기준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12개 광역시·도

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군산시의원들 “국가항만정책 수립 정치적 이용 말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 등 의원 7명은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김제시는 국가항만정책 수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일 의원 등 군산시의원들이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은 특정지역 편들기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서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행정기관의 책무이다. 구체적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무적으로 위원에 포함을 시킨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는 특정지역의 이익과 연계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군산시의회는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해당 국회의원은 4월 1일 기자회견장에서 전북자치도가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무산의 책임을 전북자치도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성, 항만 운영의 효율성, 경제적 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군산시의회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은 토사의 매몰과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항후 새만금 산단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산단 운영에 맞춰 추가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해수부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명시했다고 했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8년

에 '군산항 장단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군산항은 토사 매립에 의해 수심이 맞아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항만확장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배분을 통한 상호 보완적 통합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실지어 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군산시에서는 시비 1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새만금신항 조성을 위한 공영수면 접사용 허가, 해역이용 협의 등 각종 행정행위도 군산시에서 시행하였다. 이렇듯 새만금신항은 계획단계부터 군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직접 수행해 왔으며, 군산시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온 사업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조성 관련 행정행위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물동량 처리 순위 11위로 국내 총 물동량 15억9,000만톤의 1.4%인 2,200만톤의 처리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새

만금신항이 개장하면 물동량이 분산되어 두 항만의 장래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운영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국제무역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군산시의회는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 새만금신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구역이 아니라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 내인 비안도와 신시도 사이에 건설되고 있으며, 두리도와 일제화된 인공섬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명백히 군산시 관할 해역에 해당하며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운영체제로 관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세 번째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무책임 지령에 대한 의견제출은 정당한 자치행정의 수행이며 권리와 의무이다. /이만호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지정을”

도의회, 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의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

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제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 확산을 막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소농 보호는 필수... 직불금 확대해야”

박용근 도의원 “소농직불금 축소, 농민 생존권 위협 행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면서 “소농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원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우려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이 부재한 탓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며, 농업의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소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소상공인 외침 외면 말라”

김이재 도의원, 실질적인 긴급 지원책 마련 촉구
“긴급 지원금 확대·맞춤형 매출 회복 정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더불어민주당)이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긴급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전북도가 5월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지원책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 소상공인의 순대위변재액(대출 상환 불능으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은 2022년 150억 원에서 2024년 67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전북지역 소상공

인 경기 전망지수(80.4)와 전통신장 경기 전망지수(72.8)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올해 2월 소상공인 8만6,400곳에 총 351억원의 긴급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며, 전북도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 예산 1,643억원만은 현재 위기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긴급 지원금 확대,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맞춤형 매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를”

도의회, 강태창 의원 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호행정위원회, 군산1)이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전북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전라·충청·경상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

지로 후보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청권에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이남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최후후보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 “다른 후보지들과 비교해 전북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최고의 후보지임을 자부한다”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3개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며, 10월경 제2중앙경찰학교 최후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퇴직 교도관 사회 공헌 활동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재향 교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퇴직 교도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 교정동우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형열·정종복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 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퇴직 교정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법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 도민 안전존진, 국가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 사업 등 공익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대표 발의한 최형열 의원은 “퇴직 교도관들이 남은 여생을 쉬지 않고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만큼, 이번 조례가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대표 발의한 정종복 의원도 “지역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영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회장은 “퇴직 교정공무원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돕고, 밝은 사회를 만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에 힘써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재향 교정동우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출소자의 사회 정착과 도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통한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감사위원은 김동구·김만기·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에

는 김만기 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감사위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에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 /이만호 기자